

# 박지원 얼굴 알리기...김동철 사무실 내고 박주선도 결심 굳혀

새정치 당권주자들 위망업...광주·전남 누가 뛰나

## 강기정·천정배 고심 중...경선방식·단일화 여부 주목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모드에 진입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당권 주자들의 운과도 구제되고 있다.

우선 박지원,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사실상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과 원외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충남도당 전당대회토론회, 지난 12일과 26일 서울시당 1·2차 전당원 토론회에 빠짐없이 참석하

는 등 가장 바쁘게 전국 당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조만간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유의 마당발로 범 진노 진영 일부와 중도 진영, 구 민주계, 호남 정치권 등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헌·당규 등 당내 체제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라며 “단순한 당권 확보 여부를 떠나 모두가 승자



박지원 의원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강기정 의원 천정배 전장관

가 되는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위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호남 정치 복원’을 명분으로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와 혁신의 동력인 호남 정신을 기반으로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집권 세력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이 최근 당권 도전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며 “조만간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도 여외에도 선거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과거 세력과 인물로는 전당대회 흥행은 물론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계파와 조직, 인지도 등에서 불리하지만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성과 당당함을 바탕으로 도전한다면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가 유동적이다. 계파 리더인 정세균 의원이 당권 도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지도부 경선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원외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도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하는 전당대회가 계파 간의 진흙탕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 전 장관은 “혁신은 실종된 가운데 전당대회가 계파 전쟁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고민이 크다”며 “시간을 두고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당권 도전 여부에 관계없이 전당대회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 전 장관이 정치적 상처는 낫지만 아직까지 개혁의 상징성이 남아있는데도 호남 민심에 일정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당권 주자들의 단일화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단일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컷-오프를 통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원내대책회의 “국감 의혹 청문회로 밝힐 것” 새정치민주연합 유운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 실상을 밝혀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자 노트

## ‘빚더미’ 산단 조성 이제 그만

진퇴양난. 세풍일반산업 단지 개발 주체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실이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등 우려 국경을 거치며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자칫하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처럼 보인다.



윤현석 정치부 차장

광양만청은 기업 유지를 위해선 산단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려했지만, 정작 금융기관들은 광양만청의 채무보증도 부족하다며, 광양시의 토지매입 약속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조성 과정을 지켜본 광양시는 참여할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업비 5219억원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최근 확인해보니 실제 사업비는 모두 4976억원으로, 어느새 243억원이 줄어있었다.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변경승인을 받으려 한다는 해명이다. 다시 국비 476억원을 제외한 45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물었다. 광양만청의 계산은 이렇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3775억원, 선분양대금 200억원, 특수목적법인인 세풍산단개발(주) 투자기관 5곳의 출자금 50억원, 공사유보금 225억원, 총수익 250억원. 이것을 모두 합하면 4500억원이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조달이 안 돼 멈춰섰지만, 사실 엉성한 사업 추진 자

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을 조금 넘는 투자기관의 출자금을 제외하면 모두 추정치다. 사업비가 ‘고무줄’인 이이다.

지방채보다 높은 금리, 채무보증에 토지매입 약속까지 미치지 ‘사채업자’의 행태와 유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번번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분양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공급 먼저하고 보는 시대는 지났다. 인구정체, 제조업 약화 기조 속에 현재 추진되는 산단을 모두 채우려면, 엄청난 수의 기업이 새로 생겨나거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신규 투자돼야 할 것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주장을 그저 장난처럼 지나칠 수 없는 처지다.

더 큰 문제는 광양만청은 물론 현재 산단 조성에 나서는 모든 지자체가 미분양사태를 겪을 우려가 큰데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단 조성을 결정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임기가 정해진 단채장이나 인사 때마다 자리를 옮기는 공직자다. 뒷감당은 모두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가 맡게 돼 있는 셈이다.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부풀려진 성과만 보여 추진하는 ‘빚더미’ 산단 조성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chadol@kwangju.co.kr

## 안철수 장인상...여수 장례식장 여야 정치인 조문 행렬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8일 장인상(喪)을 당했다.

최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 프레임에 앞세워 활발한 정치 행보를 준비 중이던 안 전 대표는 갑작스런 장인의 부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밤 10시30분께 안 전 대표의 장인인 김우현(80)씨가 여주시 덕충동 한 산책로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 직후 곧장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7일 밤 11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김씨의 사망원인을 심장마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외국에서 귀국하는 막내딸을 마중하기 위해 집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첫째 딸이자 안철수 의원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등 모두 3명의 딸을 뒀다.

만사위인 안 전 대표는 장인 부고를 듣고 이날 새벽 4시께 여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건강했던 장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던 안 전 대표는 안정을 찾은 뒤 이날부터 빈소가 마련된 여

수장례식장에서 만 사위로서 조문객을 맞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와 주승용·장병완·변재일·이목희·이석현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안 전 대표를 위로했다.

또 안 전 대표의 지인인 조광희 변호사 등도 장례식장을 찾아 안 전 대표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패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웍 크 내일’ 이사진을 새로 꾸리고 민생·생활

정치 구현에 필요한 정책연구와 의제 설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민생’ 프레임에 고리로 조만간 정치 행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안 전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 초쯤부터 경제와 교육 분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T기업의 CEO, 대학교수 등 자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경제, 교육 분야에서 ‘문제해결형’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청화기자 chkim@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의 행복!

#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합니다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이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함께 생각하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안내**

행사명 제2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기간 2014. 10. 29 ~ 11. 1

장소 대구 엑스코

참석대상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중앙·지자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행사내용 행정우수사례전시, 지방발전 전략포럼, 주민참여 마당 등